진술 번복 회유·비화폰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 시도 '결정타'

재판부, 尹 구속 쟁점 판단은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 사유 경호처 직원들 총기 노출 지시 등 세가지 질문에 尹 모두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이 된 영장실질심사 막전막후(幕前幕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세가지 질문에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 사유',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이라고 지시했는지,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를 지시했느냐를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부인했다.

◇구속 가른 쟁점은=윤석열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한 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의 이유는 '증거인멸' 이다. 내란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재판을 전적으로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수사·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으며, 허위공문서작성 범행, 허위공보 범행 등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맞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특검도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있어 재범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다. 또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이 번복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경찰·특검 조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이들에 대한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질심사에서 영장 판사의 질문은=남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윤 전 대통령에게 세가지 질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 부장판사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왜 폐기했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이 가져온 계엄 선포문에 표지를 붙인 것이다. 작성 권한도 없는 사람(강 전 실장)이 갖고 와서 서명해 달라고 해서 서명했을 뿐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나중에 물어보니 한덕수(당시 국무총리)가 폐기하라고 해서 폐기했다고 들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남 부장판사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이라고 지시한 적 있나"고도 질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총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면서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처 직원들은 1인 1총을 들고 다니는데, 정작 국민을 지키는 경찰은 왜 총을 못 들고 다녀서 이렇게 다치느냐는 취지로 경찰과 총기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이 왜곡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남 부장판사는 "(대통령 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삭제지시) 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안 조치를 하라고 한 게 왜곡됐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12·3 비상계엄은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한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초단위로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주장을 펼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자 10일 오전 광주시 서구 광천터미널에서 시민들이 TV를 보고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尹 구속은 당연한 일…법과 정의 제자리 찾아가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민 반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자 광주·전남 지역민은 일제히 "당연한 일"이라며 반겼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에 낸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시민들은 재구속 소식을 듣자 "법과 정의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광주시민 김현성(57·북구 용봉동)씨는 "당연히 구속돼야 하는 일이다. 이제야 드디어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다"며 "지난 3월에 풀려난 이후 혹시나 잘못 흘러갈까봐 노심초사했다. 제대로 수사 받고 죗값을 받길 바란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미주(여·24·순천시)씨는 "이제서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상식적이지 못한 세력들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피로감을 느껴왔던 만큼 정당한 심판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계엄 트라우마'를 겪었던 5·18 관계자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엄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한번 구속되고도 풀려나 끝까지 특권을 누리고,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걸 보고 국민들은 너무나 큰 실망감과 상실감, 박탈감을 느꼈다"며 "국가안전을 위해서라도 국민이 바라는대로, 정당한 판결이 내려지고 윤석열이 사회와 격리되며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도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을 일으켜 온 국민을 슬프고 힘들게 만들더니 마침내 법과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윤석열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고,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5·18과 관련된 역사 정의도 바로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도 환영 목소리가 나왔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당연한 결과이고 오히려 너무 늦게 실현된 정의"라며 "이번 구속은 12·3내란 실체뿐만 아니라 외환을 도모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구속은 본인이 자초한 것이다.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고 궤변이나 늘어놓으니 구속되는 게 당연하다"며 "내란에 가담했던 이들이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니 곧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테고, 법정 최고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광주시민사회도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감시의 눈초리는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같은 반응이었다. 이종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장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내란 수괴가 실시간으로 외부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겼다"며 "이제라도 특검이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촛불 광장의 의미와 빛의 혁명이 퇴색되지 않도록, 사회대개혁 과제를 조속히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尹, 서울구치소 3평 독방 수용…경호 중단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0일 새벽 발부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았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었다.

입소 절차를 마친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됐다. 다만 구치소 내 빈방에 수용돼야 해 3평보다 넓은 방이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이 구금된 구치소의 방 크기도 3평 수준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연합뉴스

"사필귀정…모든 의혹 명백하게 밝혀야"

시장·지사·지역 정치권 환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자 광주·전남 지자체장과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0일 개인 페이스북에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윤석열은 구속 수감,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입니다"고 글을 올렸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비로소 정의가 다시 실현됐다"며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맞는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라고 SNS에 게시글을 남겼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 질서는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재구속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로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김주업 광주시당 위원장도 보도자료를 내고 "120일 넘게 불법적인 자유를 누렸던 내란 수괴의 구속은 당연한 상식"이라면서 "김건희 등 아직 사회 곳곳에 암처럼 퍼져 있는 내란 세력과 내란 범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낱낱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노유미(660916-2XXXXXX)
• 최후주소 : 광주 광산구 우산로95번길 60-0, 101동 1001호 (우산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피상속인 망 노유미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느단3948호로 신청하여 2025년 7월 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7월 11일

• 상속인 : 송상(720730-1XXXXXX) 광주 광산구 우산로95번길 60-0, 101동 1001호 (우산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 신고기간 : 2025. 7. 11. ~ 2025. 9. 20.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송상의 주소

고급 전원주택 매매 (명당 위치)
전남 담양 수북 쪽재골길
대지 704py. 주택 60p
카페부속건물 20p. 태양 6킬로
최고급 독일 건축재료. 경치 최고.
급 매
매 16억 9천. 은행 11억.
인수가 5억 9천
010-3646-8700

중앙신용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